



# 주간 통일정세

2012-53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 김정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 맞아 금수산 참배(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을 맞아 24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시신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경옥 당 조직부 제1부부장, 최부일 총참모부 작전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박정천 군 중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등이 함께 하였으며,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 등도 함께 참석함.

#### ● 北, 사회주의헌법 제정 40주년 기념보고대회(12/2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6일 사회주의헌법 발표(12월27일)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전함.
- 이날 대회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김양건·문경덕 노동당 비서,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 고위 간부들이 자리함.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에서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현장을 마련하고 발전 완성시켜주시신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정에 휩싸여 있으며 당의 영도따라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철저히 구현해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밝힘.

#### ● 北김정은, 9월이래 군부대 시찰 1회뿐(12/26, 조선신보)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 9월 이래 이달 25일까지 한 차례만 군부대를 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밝힘.
- 신문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보도기준)을 월별·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해 도표와 함께 보도함. 이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올해 144회의 공개활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 경제인민생활 관련 활동



이 32회(2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군 시찰 29회(20.1%), 공연 관람 24회(16.7%), 행사 참석 19회(13.2%), 기념사진 촬영 16회(11.1%),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1회(7.6%), 기타 13회(9.0%) 순임.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군부대 시찰은 주로 상반기에 이뤄졌음. 상반기에는 22회 군부대를 찾았지만 하반기에는 단 7회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그침.

● **北 김정은 "12월10~15일 위성 발사하라" 지시(12/28, 조선중앙TV)**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를 약 한 달 앞두고 "12월 10~1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음.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일부터 매일 반복해서 내보내는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를 보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올린 보고서 표지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친필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김 제1위원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하기 위한 인원들과 기체들을 서해위성발사장에 전개시킨 정황과 대책적 의견'이라는 보고서 표지에 "비준함. 12월 10일~15일 사이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준비. 사업 진행하며 정확한 발사 날짜와 시간은 차후 지시. 대기할 것! 김정은 2012.11.14"라고 썼음.

● **北 김정은 軍최고사령관 추대 기념행사 개최(12/2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일(12월 30일)을 앞두고 노동당의 외곽단체를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음.
- 북한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을 기념하는 청년 학생들의 경축모임이 전날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모임에서 "김 제1위원장이 천재적인 군사적 지략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영군술과 하늘 같은 덕망을 지녔다"며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는 역사적 사변이고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확고히 담보한 민족의 대경사"라고 칭송했음.
-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도 2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모임을 여성회관에서 열었고,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과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지난 26일과 25일 각각 경축대회를 개최했음.

● **北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 계속 행사할 것"(12/29,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제법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



는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함.

- 신문은 이날 '평화적 우주개발은 당연한 자주적 권리행사이다'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북한)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시빗거리가 될 수 없는 정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우리의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권행사"라며 올해 진행된 두 차례의 위성발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 北 "자위적 전쟁 억제력 더 강화해야"(12/29,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의 핵심 수뇌부인 현영철 총참모장은 29일 "국방공업 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영철 총참모장은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온 나라에 군사중시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현 총참모장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건군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며 "(김 제1위원장이) 혁명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강성변영의 기적을 이룩해 나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라고 찬양했음.
-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불패의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중앙보고대회에는 현영철 총참모장 외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양건·문경덕 당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영춘·오극렬·현철해·김정각 군 차수 등이 주석단에 참석했음.

### ● 北 김정은, 귀화 日여성 편지에 친필 답장 눈길(12/30,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귀화한 일본 여성이 보낸 편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친필 답장을 보낸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돼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함경남도 영광군 장흥리에 거주하는 림경심이라는 이름의 귀화한 일본여성이 김 제1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과 김 제1위원장이 이 일본여성에게 보낸 친필을 사진과 함께 1면 기사로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한 것에 대해 김 제1위원장과 당에 고마움을 전했음.



- 그는 편지에 "만인들이 죄를 짓고 3년이나 법치리까지 받은 경력이므로 과연 당원의 영예를 지닐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일본인 여성으로 내어난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다"고 적었음.
- **北 '김정은 올해업적'으로 로켓·전방시찰 부각(12/30, 노동신문)**
  -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1주년을 맞은 30일 그의 '올해의 업적'으로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최전방지역 시찰을 집중 부각했다고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제1위원장이 올 한해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사실상 결산하는 형식으로 지면을 꾸미고 1~2면에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진두에 모신 선군혁명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라는 사설을 실었음.
  - 이 사설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와 운명 개척에서 얼마나 커다란 행운으로 되는가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다"며 구체적 성과 중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가장 앞에 세웠음.
- **中 최고지도부, 김정은에 잇따라 연하장 보내(12/30, 노동신문)**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28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전했다.
  -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 2013년 새해에 즈음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胡錦濤) 동지와 국무원 총리 온가보(溫家寶) 동지가 연하장을 보내왔다"며 연하장들은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관계부문 일꾼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하루 전 노동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해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류홍차이(劉洪才) 북한주재 중국대사를 통해 지난 28일 김 제1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음.
- **北 김정은, 어뢰정 지휘하고 판문점 숲초병 소집도(12/30, 조선중앙TV)**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1주년을 맞은 30일 북한 매체들이 김 제1위원장과 관련한 각종 무용담을 '목격담' 형식으로 공개하며 그의 행적을 미화했음.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TV기념무대'를 녹화실황 형태로 방영했음.
  - 이 프로그램은 김 제1위원장의 각종 군부대 현지시찰을 직접 수행하거나 곁에서 지켜본 군인들이 차례로 무대에 등장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음.





#### ■ 김정은동향

- 12/24, 김정은 黨 제1비서, 中 호금도 주석 생일 70돌 즈음 '北-中친선 강조' 축전(12.24, 중통·중방)
- 12/24, 김정은 黨 제1비서, 12.24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및 김정숙 생일 95돌 즈음 혁명학원들과 전국의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양로원·양생원 등 단위들에 식료품들 전달(12.24, 중통)
- 김정은 黨 제1비서, '광명성-3'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과 黨중앙위원회에서 기념 촬영(12.30, 중방·중통)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조연준, 최춘식, 리응원 등 참석

#### ■ 기타 (대내 정치)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12.25 김정은 黨 제1비서의 '軍 최고사령관' 추대(2011.12.30) 1돌 기념 경축모임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2.25, 중통)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1돌 즈음 김영남·최영림·최룡해 등 黨·政·軍 간부들, 12.26 조선기록영화(아버이 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어) 관람(12.26, 중통)
- '사회주의 헌법' 발표('72.12.27) 40돌 관련 김일성 3父子의 '사회주의 헌법 제정·고수 및 김일성-김정일헌법 정식화' 등 칭송 및 '김정은 영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를 끝없이 빛내자'고 강조(12.27, 중방·중통·노동신문 사설/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어 나가자)
- 최영림 총리, 12.27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 숙소방문(12.27,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 현지 요해(12.28, 중통·평방)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돌(12.30) 경축 중앙보고대회, 12.29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12.29, 중방·평방·중앙TV)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총참모장/보고),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국태,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정각,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사회), 주규창, 김창섭, 노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최춘식 등 참석
- 김정은 黨 제1비서, 12.26 귀화 일본여성 '림경심'(함남 영광군 장흥리/1961년 9월 귀화)에게 친필 전달(12.29,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12.29 평양산원 현지요해(12.29, 중통)



- 黨 중앙위, 12.30 목란관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석下 '광명성-3'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등 축하 연회 재차(12.21, 목란관) 개최 (12.31, 중통·중방·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김기남(연설),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광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등 참석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1돌 즈음 '광명성-3호 발사 등 선군혁명영도' 부각 선전 및 '김정은은 선군조선의 불패성의 상징이고 미래이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영도의 중심'이라고 선동(12.30, 중방·중통·노동신문/위대한 최고사령관을 진두에 모신 선군혁명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 나. 경제

### ● 올해 북-중 무역 사상 최대 전망(12/30, 연합뉴스)

- 올해 북한-중국 간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중 교역액은 49억5천938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6억6천539만 달러)보다 6.3% 늘었음.
- 올해 월평균 교역액이 4억~5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 작년 수준(56억2천만 달러)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수출입액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에 28억5천972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0억9천966만 달러 상당을 수입해 7억6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다. 이는 작년(5억7천만 달러)보다 33%나 증가한 것임.
- 대북 수출은 작년 대비 9%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2.7% 느는 데 그쳐 흑자 폭이 확대됐음.
- 중국의 수출품은 원유·석유제품이 4억8천296만 달러(16.8%)로 가장 비중이 컸고 20t 이상 화물차(8천754만 달러), 밀가루(5천262만 달러),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4천389만 달러) 등으로 다양했음.
- 반면 수입품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연탄(10억3천746만 달러), 철광석(2억556만 달러), 수산물(7천598만 달러), 비합금선철(6천354만 달러) 등 1차 상품이 주류를 이뤘음.

## 다. 사회·문화

### ● 北, 소년절·어머니날 명절로 지정(12/27, 연합뉴스)

- 북한이 '소년절(6.6)'과 '어머니날(11.16)'을 국가 명절로 새롭게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소년절과 어머니날을 내년부터 명절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북한 달력에도 이를 쉬는 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에 따라 북한의 내년 명절과 공휴일은 당 창건



일(10.10), 김일성 생일(4월15일), 김정일 생일(2월16일) 등을 포함해 총 21일인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신분제, '富' 등장에 변화 조짐(12/28, AP 통신)**

- 반세기 넘게 북한 사회의 바탕을 이룬 북한판 카스트 제도, 이른바 '출신성분제'(이하 성분제)가 부(富)의 등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8일 보도함.
- 성분제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핵심, 동요, 적대 분자 등 3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가 부인하는 것과 달리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신분 제도라고 AP는 소개함. 이어 이 같은 제도는 김일성 주석이 1950~60년대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상하는 한편 '잠재적인 적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도입했다고 덧붙임.

● **北태블릿PC "인터넷 불통이지만 학습용 인기"(12/28,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28일 자사 기자가 평양에서 북한제 태블릿 PC '삼지연'을 실제로 사용해봤다며 관련 기사와 사진을 내보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삼지연은 애플사의 태플릿 PC 아이패드(10인치)와 비슷한 크기다. 실제로 켜보자 화면에는 20여개의 아이콘이 나타났음.
- 지난 20일 평양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보면 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 29개 중에는 '고기잡이 유희'나 '비둘기 유희', '고무총 쏘기', '그림 맞추기' 같은 게임 앱이 포함되어있으며, 태블릿 PC와 함께 촬영된 포장용 상자에는 제조사를 가리키는 듯 '조선컴퓨터중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음.

● **북한 여가수 중국 진출...올해 3차례 음반 발매(12/29, 흑룡강신문)**

- 성악을 전공한 북한의 한 20대 여가수가 중국 가요계에 진출해 최근 5개월 사이에 3차례 정식 음반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29일 전했다.
- 중국 흑룡강신문 등에 따르면 베이징에 체류 중인 북한 가수 김송미(金松美·27)는 8월 중국에서의 첫 번째 앨범 '수양버들'을 시작으로 10월 '조선명곡집-조국', 지난 24일 '조선명곡집-사랑'을 잇따라 발표했다.
- 이들 앨범에 수록된 곡은 대부분 북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에게 친숙한 1970~80년대 북한가요임.





- 기타 (사회·문화)
  - 조선노동당출판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활 것이다' 출판(12.24, 중통·중방)
  -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12.25 '위성발사' 기여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12.25, 중통·중방)
  -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일꾼들 축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12.26 김기남·박도춘·김양건 등 참가下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12.26, 중통)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北노동신문 "日 우경화·군국화 심각한 단계"(12/24,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냄.
  - 신문은 이날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선거 결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지표를 많이 모았다며 "여기에는 일본의 극우익 정객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본 사회의 군국화 책동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함.
  - 또 "일본 극우세력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일본 사회의 주요 화제거리로 올려 그것을 공식화, 정례화, 대중화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며 "지금 일본 사회의 우경화, 군국화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아시아 재침은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문제에 대해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는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는 경우 일본 무력이 또다시 무모한 재침전쟁의 길에 뛰어들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군국주의 명령을 되살려 재침을 실현하려는 극우익 정객들의 무모한 망동은 일본을 망국으로 떠미는 행위"라고 비난함.
- **북한, 국제김정일상 제정(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21년을 맞아 '국제김정일상'이 제정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국제김정일상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기념일인 광명성절을 계기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온 세계의 자주화



와 평화위업실현, 인류문화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모든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경제인들에게 수여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국제김정일상 이사회가 결성됐고 국제김정일상 수상자는 상장과 금메달, 컵을 받는다고 전함.

● **北, 내년 1월 김정일 시신 관광객에 공개(12/26,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

- 북한이 내년 1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외국 관광객에 공개할 것이라고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가 26일 전함.
- 여행사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북한이 내년 1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청진에 자유무역구 설치 희망(12/27,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항만이 있는 청진시에 자유무역구를 설치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가 27일 전함.
- 신문은 익명의 북한 인사를 인용해 "북한은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개방하고 앞으로 청진시를 자유무역구에 넣을 의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 선전(深川(土+川)), 동원(東莞)과 같은 도시를 모방해 청진항 개발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함.
- 또 신문은 북한 동해안의 청진항이 원래 산적화물 부두로, 컨테이너 하역·운송이 불가능하지만 서해안의 남포항과 함께 북한 최대 항만이며 식량, 강철 등을 주로 운송한다고 소개하면서 이미 2008년 6월 북한과 접경한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시가 청진항, 청진철도국과 항만 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중국 내륙 화물의 육·해복합운송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임.

● **北 "올해 국제경기서 190여개 메달 획득"(1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90여 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190여 개의 메달을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영국에서 열린 제30차 런던올림픽에서 김은국 선수(남자역도 62kg급)가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따.
- 또 여자축구선수들이 중국국제여자축구초청경기대회와 아시아축구연맹(AFC) 도전컵대회 등에서 우승했고 김은화, 리은심 선수는 각각 국제축구연맹(FIFA) 2012 U-20 여자월드컵과 2012 국제축구연맹 U-17 여자월드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황금축구화상(Adidas Golden Boot)'을 받음.



- **中네이멍구서 北유명화가 작품전시·판매 행사(12/27, 중국신문사)**

  - 북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에서 26일 개막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주최로 8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의 유화 99점과 수묵화 7점을 전시·판매함.
  - 주최 측은 출품작들이 북한 예술계 최고 영예인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김상훈, 한태순을 비롯해 '공헌예술가' 최석근, 정영화, '일급예술가' 한일, 최윤철 등 정상급 화가들의 신작이라고 소개함.
  
- **中 일부 지방서 탈북자 단속 완화(12/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탈북자 단속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최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온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318파트너스' 관계자는 중국 공안 관계자에게 '탈북 여성을 체포하지 말라'는 내부 문건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힘.
  - 관계자는 "탈북자가 교통, 통신, 전기 등을 담당하는 중국 지방정부 관련 업체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기도 한다"며 "탈북 여성은 하루 60위안, 남성은 100위안을 받는다고 한다"고 설명함.
  
- **中외교 부부장 "北지도자, 정확한 판단해야"(12/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부부장(차관)이 북한 지도자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함.
  - 수석 부부장인 장즈쥘은 조만간 양제즈(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의 뒤를 이어 외교부장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시되는 인물임.
  - 장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그들(북한 지도자들)이 지역의 평화,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판단 및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장 부부장은 이날 '중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정책 조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 "독립 주권국인 조선(북한)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는 조선 지도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음.
  - 그는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장 부부장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음.
  
- **中 시양그룹, 北 대신 러시아로 투자처 바꿔(12/28, 연합뉴스)**

  -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계약 파기로 낭패를 본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이 러시아로 투자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28일 "시양그룹과 북한 당국 간에 계약과 관련해 '분규'가 장기화하면서 시양그룹이 새로운 철광 공급지로 러시아를



택해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시양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대북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랴오닝(遼寧)성에 본사를 둔 시양그룹은 2억 4천만 위안(410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영봉(嶺峰)회사와 공동으로 용진철광에서 철광석을 채취해 철 함유량을 높이는 선광 사업을 벌이다가 갈등 끝에 중도 하차했다.

● **北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해야" 압박 강화(12/2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내년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기 출범을 앞두고 최근 북한 매체들이 잇따라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을 초래한 모든 극단적 사태들의 이면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대조선 정책 집행에서 기존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 또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 최악의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에 대응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천백번 정당할 것"이라며 "미국은 상대를 바로 보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는 도발설과 위협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 군부의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설을 제기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체질화하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는 낯두리 외에 다른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비난했다.

● **일본 경찰청 "실종자 868명 납북 가능성 조사"(12/29, 교도통신)**

- 일본 경찰이 납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가 868명이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29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경찰청 외사과는 전국의 경찰이 납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는 실종자가 11월 1일 현재 868명이라고 공개했다.
- 경찰청의 이번 발표는 도쿠시마(徳島)현의 납치피해자 지원단체가 경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외사과 소관의 수사·조사 대상 실종자는 홋카이도 경찰 관내에서 81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65명), 경찰청 본청(58명), 니가타(46명), 가나가와(45명) 등의 순이었음.



####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국가정보위(NIC) 보고서(北의 핵전파방지가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등) 관련 '미국은 있지도 않는 핵전파와 핵위협에 대해 떠들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며 '저들의 핵무기배치와 핵우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12.25, 중통/범죄적 핵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궤변)
- 시진핑(중국 黨 총서기)·리건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왕가서(대외연락부장), 12.28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보내는 새해 연하장을 김영일(黨비서)에게 전달(12.28, 중통)
- 호금도 中 주석과 운가보 총리, 12.28 해당부문 일꾼을 통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연하장 전달(12.29, 중통)

#### 나. 6자회담(북핵)

##### ○ 北 "美, 핵확산·핵위협 떠들 명분 없어"(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핵확산과 핵위협에 대해 떠들 명분이 없다"며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을 지적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반박함.
- 통신은 이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조선의 핵 전파 방지(핵확산 방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라느니 '북조선의 핵무기 사용이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것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전파 위협'을 걸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핵무기 배비(배치)와 핵우산 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핵 전파 방지와 핵물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것을 적극 실천해왔다"며 "미국은 우리의 있지도 않은 '핵 전파'와 '핵위협'에 대해 떠들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비난함.
- 또한 미국이 매년 남한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등 핵확산과 핵위협을 주범이라며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 지배 야망과 핵 공갈 책동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물리쳐야 할 엄중한 도전"이라고 강조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 北 "애기봉 등탑, 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망동"(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 등탑에 대해 "전연(전방) 일대에서 심리모략전을 벌이는 것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한 망





동"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교행사'의 간판 밑에 감행한 (애기봉) 등탑 점등은 우리(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같이 주장하면서, "(남측) 국방부가 주관하는 애기봉 등탑 점등은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다"며 "(남측) 군부 호전광들은 2년 전에도 우리(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 조치를 공공연히 선포하고 그 일환으로 애기봉 등탑을 가동하면서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개시했었다"고 밝힘.
- 이어 "실제로 애기봉 등탑에 불을 켜는 놀음을 벌일 때마다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한층 격화됐다"며 "긴장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초래될 모든 재난과 후과의 책임은 이명박 보수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현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차당선인에 기대감(12/28,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기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지난 19일 대선 이후 남한의 서부전선 애기봉의 등탑 점등, 국방백서에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선 공식화 등을 '동족대결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의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아서서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논평에서 지난 21일 남한의 국방백서 발간에 대해 "역적패당이 임기 말까지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기(차기) 정부도 저들이 깔아놓은 북침의 궤도를 따라 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며 "그들(차기 정부)이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명박 역적패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류우익 "北 미사일, 김정은 정권의 비상식적 행동"(12/28,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은 28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김정은 정권의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재개관식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이국땅에서 난민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미사일 발사에 막대한 비용을 허비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상식적 행동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음.
- 류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는 다시 한번 큰 기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北조평통 "NLL은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12/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공식



화한 데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문을 통해 "괴뢰들이 1967년부터 '국방백서'라는 것을 발간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쫓아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종에 처한 이명박 패당은 어떻게 해서나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그대로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보도문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이라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며 "그것은 영해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규범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비법선"이라고 강조했다.

#### ● 北로켓 엔진 추정 잔해 6점 인양(종합2보)(12/28, 연합뉴스)

- 북한 장거리 로켓(은하-3호)의 엔진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서해에서 인양됐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군산 서방 160km 해저에서 엔진 추정 잔해물 6점과 기타 소형 잔해물을 건져 올렸다"며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많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이 물체가 은하 3호의 엔진 잔해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 장거리 로켓 기술의 비밀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나. 경제·사회·문화

##### ● 탈북자, 통일 전망 가장 낙관(12/28, 연합뉴스)

- 탈북자들이 통일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8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탈북자를 제외한 내국인과 탈북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치, 정서, 생활문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각국 한인들의 분단·통일 의식에 시각차가 존재했음.
- 우선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내국인은 30.1%만이 '밝다'고 답한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62.4%,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경우 59.5%가 '밝다'고 전망했으며, 중국 거주 조선족과 일본의 조선인은 각각 48.5%, 30.6%가 통일에 대해 낙관했음.

##### ● 백두산 천지, 첨단 3D 영상지도로 본다(12/30, 연합뉴스)

-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해 31일부터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3D 영상지도로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음.
- 백두산 3D 영상지도는 지난 8월에 촬영된 50cm급 최신 인공위성 영상으로 구글지도보다 해상도는 4배, 지형 세밀도는 9배가량 뛰어난 것임.



- 상세한 지명이 표기돼 있어 백두산의 이모저모를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던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브이월드를 통해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관 20년만에 새 단장(12/30, 연합뉴스)**

-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개관 20년만에 새 단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전망대는 올해 마지막 일요일인 30일 기획전시실을 최신 남북 소식으로 교체해 방문객을 맞았으며, 기획전시실은 비무장지대(DMZ)의 현재와 과거 모습에서부터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다양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음.
- 사진은 전쟁의 상흔과 DMZ의 자연을 담은 것으로 공모전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선별했으며, 또 역대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 해외 인사들이 방명록에 남긴 통일 염원 메시지를 관람할 수 있음.

■ **기타 (대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7호(12.28)] 국방부 발간 '2012국방백서'(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규정 등) 관련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00억적폐당의 대결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2.28,중통·중방/중통·노동신문·평방 : 전쟁의 불씨를 터뜨리기 위한 대결망동)

● **북한연구센터 제공**





2차 회의를 열지 못했음.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임. 미국은 북한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인 준비 태세 강화 카드를 내세우며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중국은 강경 조치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추가 제재에 난색을 보이고 있음.

-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대북 조치의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함.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새 지도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옴. 한국과 미국은 현재로서는 결의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 우리 정부가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안보리 대북 조치의 논의가 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조치의 형식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은데다 논의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추진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임.
-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올 초부터 꾸준히 안보리 담당 인력을 늘려 왔고 지금은 '안보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한 상태임.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 사안을 놓고 거의 매일 회의를 열기 때문에 앞으로 김숙 대사는 사실상 안보리에 전념하고 통상 업무는 2명의 차석대사가 맡게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2월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맡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

#### 나. 미·북 관계

##### ● 北 "美, 핵확산·핵위협 떠들 명분 없어"(12/25,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은 핵확산과 핵위협에 대해 떠들 명분이 없다"며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을 지적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조선의 핵 전파 방지(핵확산 방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라느니 '북조선의 핵무기 사용이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것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전파 위협'을 걸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핵무기 배비(배치)와 핵우산 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 통신은 이어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핵 전파 방지와 핵물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것을 적극 실천해왔다"며 "미국은 우리의 있지도 않은 '핵 전파'와 '핵위협'에 대해 떠들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비난함.





- 통신은 또 미국이 매년 남한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등 핵확산과 핵위협이 주범이라며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 지배 야망과 핵 공갈 책동이아말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물리쳐야 할 엄중한 도전"이라고 강조함.
- 미국 NI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2030년 맞닥뜨릴 도전 과제의 하나로 '핵확산'을 지목한 뒤 이란과 북한을 대표적 위협 국가로 꼽았음.

#### 다. 중·북 관계

##### ● **중외교 부부장 "北지도자, 정확한 판단해야"(12/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부부장(차관)이 북한 지도자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함.
- 수석 부부장인 장즈쥘은 조만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의 뒤를 이어 외교부장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시되는 인물임. 장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그들(북한 지도자들)이 지역의 평화,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판단 및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힘.
- 장 부부장은 이날 '중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정책 조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 "독립 주권국인 조선(북한)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는 조선 지도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함. 장 부부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비록 추가적인 한반도 정세 악화를 우려, 대북 제재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로켓을 추가 발사하거나 3차 핵실험에 나서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그는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함.
- 장 부부장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 장 부부장은 "중국은 관련국들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이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관련국들이 한반도에서 번갈아가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언급함. 그러면서 장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들의 관심사 해결이라는 한반도정책 3원칙 가운데 한반도의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부연함. 장 부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 한국, 미국 등 관련국들 사이의 심각한 상호 신뢰 결여라면서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쌓아가야 한다고 지적함.

#### 라. 일·북 관계

##### ● **北노동신문 "日 우경화·군국화 심각한 단계"(12/24,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



서 자민당이 승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음.

- 노동신문은 이날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선거 결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지표를 많이 모았다며 "여기에는 일본의 극우익 정책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본 사회의 군국화 책동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함.
- 또 "일본 극우세력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일본 사회의 주요 화젯거리로 올려 그것을 공식화, 정례화, 대중화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며 "지금 일본 사회의 우경화, 군국화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아시아 재침은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특히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문제에 대해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는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는 경우 일본 무력이 또다시 무모한 재침전쟁의 길에 뛰어들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군국주의 명령을 되살려 재침을 실현하려는 극우익 정책들의 무모한 망동은 일본을 망국으로 떠미는 행위"라고 비난함.

#### ● 일본 아베 정권,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불허(12/26, 연합뉴스)

- 26일 출범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이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수업료 무상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아베 정권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함. 이는 문부과학상에 취임하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관방 부장관의 강력한 의사를 반영한 것임. 아베 정권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정권은 2010년 4월부터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 엔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동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음.

마. 기 타

#### ● 中 시양그룹, 北 대신 러시아로 투자처 바꿔(12/28, 연합뉴스)

-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계약 파기로 낭패를 본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이 러시아로 투자처를 바꾼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28일 "시양그룹과 북한 당국 간에 계약과 관련해 '분규'가 장기화하면서 시양그룹이 새로운 철광 공급지로 러시아를 택해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 소식통은 "시양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대북 투



- 자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 랴오닝(遼寧)성에 본사를 둔 시양그룹은 2억 4천만 위안(410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영봉(嶺峰)회사와 공동으로 용진철광에서 철광석을 채취해 철 함유량을 높이는 선광 사업을 벌이다가 갈등 끝에 중도 하차함. 시양그룹은 합작이 수년간 지속돼 북한이 자체적인 선광 작업 능력이 갖춰지자 독점적으로 이득을 챙기려고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3천120만 달러(332억 6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시양그룹이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법률적으로 시양그룹에 더욱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고 맞서왔음.
  - 시양그룹 사건은 중국 내부에 대북 투자 신중론을 불러일으켰음.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최근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대북 투자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장렌구이(張璉圭<王+鬼>)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 광산 투자가 중국 투자자에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되고 있지만 내재한 위험을 살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베이징동방광산자원정합유한공사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풍부한 광산 자원이 중국 기업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북한 내 여건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원자력 기술이전협의 마무리(12/30, 연합뉴스)

-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국이 원자력 공동연구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이전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한미 양국간 원자력 기술이전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끝내고 현재는 각국이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양국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도 종료된다"고 말함.
- 한미 양국은 그동안 협의한 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번 실무 협의를 어떤 형식으로 문서화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런 내부 검토에는 대략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해짐. 특히 양국간 원자력 기술이전에 대한 협정(가칭)이 체결되면 한미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양국이 공동 연구에 자국 원자력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이 기술이전 협정에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임.
- 나아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쟁점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는



2011년부터 10년을 시한으로 일단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2014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협상에 직접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협상 분위기를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는 기여할 것이라 분석에서임.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차례 진행된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협정에 새로 반영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핵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한국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원자력협정 협상은 2기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내년 3월께부터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국회 비준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끝나야 함.

#### 나. 한·중 관계

##### ● 中, 유네스코에 만리장성 길이 확장 보고(12/25, 연합뉴스)

- 중국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인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여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음.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올 6월24일부터 7월6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만리장성의 길이가 2만km에 달한다고 수정 보고한 데 이어 이달 초 만리장성의 길이를 2만km로 확정함.
- 이는 중국이 앞서 유네스코에 보고한 만리장성 길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임.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당시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에 대해 "5천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은 완벽하게 보존하기 어렵다. 특히 6km에 달하는 북쪽에 있는 만리장성 지역은 보존하기도 어렵고 절반만 남았다"고 서술한 바 있음. 이 같은 중국 측 서술에 따르면 만리장성 전체 길이는 북쪽에 있는 만리장성을 절반만 포함하면 8천km, 북쪽에 있는 만리장성을 모두 포함시켜도 1만1천km라는 계산이 나옴. 따라서 중국은 이번 러시아 회의에서 만리장성 길이를 최소 9천km, 최대 1만2km 늘여 보고한 셈임.
- 중국은 또 이번 러시아 회의 때 만리장성의 주요 지역의 주변 경계를 수정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경계를 일부 수정했지만 소폭이며 지도를 대조해본 결과 우리가 우려하는 고구려 산성이나 발해 산성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러시아 회의 이후 후속절차에 따라 세계유산의 일반 설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달 1일까지 그 내용을 확정해달라고 각국에 요청했으며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는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조사를 거쳐 나온 수치로, 2만km를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은 이번에 만리장성의 경계 수정을 하면서 은근슬쩍 그 길이도 늘인 셈임. 하지만 세계유산의 경계를 확정 짓는 기준은 세계유산의 면적과





완충 지역 면적이기 때문에 길이 등 세계유산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서술 변경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실제로 수단의 계벨 바르칼과 나파탄 지구 유적의 경우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 서술에 따르면 60km에 걸쳐 유산이 산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의 면적은 183ha에 지나지 않음.

- 세계유산의 경계를 확정 짓는 면적을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국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만리장성 길이를 늘여서 보고 한 것은 올 6월 초 만리장성의 길이가 2만km가 넘는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임. 중국 국가문물국(한국의 문화재청 해당)은 6월5일 고고학 조사 결과 역대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2만1천196.18km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함. 당시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이 만리장성을 고구려와 발해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역사 왜곡 논란이 가열됐음. 중국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만리장성 길이를 2만km로 수정 보고한 것도 만리장성 길이가 2만km에 달한다는 중국 측 주장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만리장성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음.

#### 다. 한·일 관계

- **韓日외교장관 "관계발전 노력"..아베 정권 후 첫통화(12/27, 연합뉴스)**
  - 한·일 외교장관은 27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함.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전화를 걸어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함. 김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함.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며 한국과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힘.
- **일본 외무상 "고노담화 외교 쟁점화하지 말아야"(12/28, 연합뉴스)**
  -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 "외교 쟁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이같은 발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날 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인정할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학술적 검토를 거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 기시다 외상은 "관방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이라며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고노 담화 인정 여부를) 쟁점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라. 미·중 관계

● 미 의회 보고서" 중국 신 지도부 경직된 태도 버리지 못해"(12/24, 산케이신문)

- 미국 의회의 대 중국 정책의 자문기관 '미 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는 23일, 11월의 중국 공산당 제 18회당대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분석한 보고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이번 신지도부 역시 경직된 현상 유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개혁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대미정책도 지금까지의 연장일 것이라고 진단함.
-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당대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지도부를 선출함. 위원회의 보고는 우선 이 지도부 선출의 방법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폐쇄적으로 불투명한 지도자의 선택 방법은 변해가는 중국의 모습에 비해 시대착오적인 방법이다"라고 비판함. 지도층이 당에 대한 충성도나 기존의 지도자로부터의 추천이라고 하는 구태적인 기준으로 선택되는 것 자체가, 보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인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함. 더불어 이 보고서는 신지도부는 향후 5년 정도는 개혁이나 쇄신은 볼 수 없을 것이 라는 예측을 내세웠음.

마. 미·일 관계

● "美, 日 이와쿠니 기지에 F35 16기 배치 예정"(12/25, 연합뉴스)

- 미국이 최신에 스텔스기인 F35 전투기 16기를 일본의 주일 미군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미군이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시에 있는 주일 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F35 전투기 16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인 이와쿠니시에 설명함.
- 미군은 이와쿠니 기지에 현재 배치된 FA18 전투기를 F35로 대체할 방침임.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2017년에 F35 전투기를 해외에 있는 기지로는 처음으로 일본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밝힘.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는 기종은 F35 'B'형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며, 소음이 통상적인 F35기보다 큰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이와쿠니 기지에 F35기를 대거 배치하는 것은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미국은 이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가데나 기지에 스텔스 성능을 갖춘 F22를 배치해 놓았음. 일본도 F35기를 항공자위대의 F4기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결정, 2016년 말까지 우선 4대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42대를 도입할 방침임.



### ● 아소 "美, 달러 가치 높여라" 역공(12/30, 연합뉴스)

- 엔 가치 하락을 겨냥해 전례 없이 노골적인 정책 기조를 내세워온 일본 자민당 신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에 대해 강하게 환율 역공에 나선.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실무 총책임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포문을 열었음. 아소는 "미국이 (환율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가리았히려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늘 표방해온 대로) 강한 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유로도 그래야 한다"고 덧붙임. 아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음. 지난 2009년의 주요 20국(G20) 정상회담의 환율 공조 약속을 '일본처럼 잘 지킨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함. 그는 G20 회동 후 달러와 유로에 대해 엔 가치는 크게 뛰었지만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역내국은 별로 없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도 앞서 2009년 G20 회동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인 나라가 독일, 한국, 캐나다 및 호주 등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아소는 기자들에게 "G20에서 몇 나라가 약속을 지켰는지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반문하고 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킨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함.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고 덧붙임.
- 아소는 28일 오전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음.. 그는 "최근의 일방적 엔 가치 급등이 점진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엔 급등) 상황이 재개될 가능성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월스트리트 저널은 29-30일 자 주말판에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엔에 대한 달러 가치가 30% 하락해 일본 수출업체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함. 데이터뱅크의 오쿠 데이크 시장 분석가는 저널에 최소한 51개 일본 기업이 올 상반기 환율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했다고 지적함. 또 주저앉은 이들 기업의 부채가 그 이전 4년에 환율 부담으로 문을 닫은 기업의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게 집계됐다고 덧붙임. 그만큼 최근의 엔 가치 급등 충격이 심각했다는 것임.
- 닛산 자동차 분석에 의하면 달러에 대한 엔 가치가 1엔 땀 때마다 회사의 영업수익 손실이 연간 기준으로 200억 엔으로 추산됐다고 저널은 전함. 닛산-르노의 카를로스 곤 최고경영자(CEO)는 "환율이 심각한 경쟁력 저해 요소의 하나"라고 강조함. 그는 앞서도 엔·달러 환율이 100엔 내외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함.
- 현재 환율은 85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음. 아소는 취임 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엔 가치 하락에 너무 노골적'이란 지적에도 반박함. 그는 "우리가 과격하게 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아직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도 "엔 가치 하락이 수출업체에는 반갑겠지만, 수입업체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함.

#### 바. 미·러 관계

- **"러-美 시리아 해법 합의된 것 없다" <러'외무부>(12/28, 연합뉴스)**
  - 시리아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미국 간 사전에 합의된 계획은 없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밝힘.
  -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시리아가 러시아와 미국의 사태 해결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란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러한 계획은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논의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함.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아랍연맹(AL) 시리아담당 특사인 라크다르 브라히미 및 미국 측과 지난 6월 30일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의 행동 계획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함. 그는 "제네바 합의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루카세비치는 이어 러시아가 상륙함을 이용해 시리아 거주 교민들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추측일 뿐이라며 "기지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일을 하나의 실타래로 묶고 있다"고 지적함. 최근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 상륙함들이 시리아 타르투스 항으로 출발한 것과 시리아 내 자국 교민 대피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임.
  - 그는 또 이날 이루어진 파이잘 알 미크다드 시리아 외무차관의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 이는 시리아 유혈 사태를 중단시키려는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뿐 아니라 야권 조직들과도 대화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날 미크다드 차관과의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축출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루카세비치는 이밖에 29일 브라히미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 계획을 확인하면서, 특사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시리아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러시아 입양금지법 채택으로 고아 46명 미국행 무산>(12/29,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최근 미국행이 결정됐던 46명의 고아가 러시아에 남게 됐다고 현지 고위 관리가 28일(현지시간) 밝힘.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날 TV 방송 '도슈디'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52명이 미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으나 이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미국행이 확정된 6명을 제외하고 46명은 러시아에 남게 됐다"고 설명함. 이에 앞서 아동 권리 담당 대통령 특사 파벨 아스타호프는 미국행이 좌절된 고아들의 운명은 그들이 사는 지역의 주(州)정부가 책임져



- 야 한다고 요구함. 아스타호프는 주지사들이 러시아에 남은 아이들이 국내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함.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에 서명함.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루 전 대통령 서명 절차에 넘겨졌음. 푸틴 대통령 서명으로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함. 지난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두 살배기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국인들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러시아 내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에 의해 운영돼온 단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러시아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기타 활동을 추진하는 비정부기구(NGO)의 러시아 내 활동도 금지됨.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조항도 법안 내용 가운데 하나임.
  - 지난달 발효된 미-러 입양 협정 파기를 규정한 이 법안 채택으로 러시아 아이들의 미국 입양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음. 미국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러시아 아이들을 입양해온 국가였음.
  -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전체 입양아 수는 1만800명으로 이 가운데 3천400명이 외국으로 입양됐음. 미국이 956명, 이탈리아가 798명, 스페인이 685명, 프랑스가 283명, 독일이 215명, 아일랜드가 129명, 이스라엘이 87명 등의 러시아 아이를 입양함.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외국으로 입양된 러시아 아이는 모두 4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사. 중·일 관계

- "중일 간 다표위다오 전쟁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12/27, 인민일보)
  - 최근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국제동향 관련 황서(黃書)에서 다표위다오 문제를 언급하며 중일 간 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이에 대해 국무원 타이완사무관공실의 판리칭(范麗靑) 대변인은 26일에 "다표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이며, 현재 일본 측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모두가 이 문제에 촉각을 세우게 되었고, 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잘못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함.
  - 이 밖에도, 양이(楊毅) 대변인은 타이완 어민들의 권익에 대해 "다표위다오 인근 어장은 양안 어민들의 전통적 조업 장소로 양안 어민들의 어업권을 수호하는 것은 양안의 책임이다"라고 밝힘. 또한 대륙 측의 해양 감시선이 다표위다오 해역에서 순찰을 진행하고 어업권을 수호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국은 이를 지속할 것이며 양안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고 전함.





- **외교부 대변인, 일본 新정권 중국과 더불어 나아가길(12/27, 인민일보)**
  -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6일 연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새 정권 수립 이후 중국과 함께 나아가며,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전함.
  - 26일 아베 신조 총재가 일본 국회 중·참의원 총선에서 당선되어 일본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국가로 안정적인 양국 관계는 양국은 물론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일본은 새 정권 수립 이후 중국과 함께 나아가며,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답변함.
  - 더불어 아베 신조 일본 신임 총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국방군을 건설하며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중국은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아시아의 평화 발전에도 이롭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중일 간 4개 정치적 문건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답변함.
  - 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백하고 일관적임.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의 영유권 수호에 대한 의지와 결심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웃국가와의 영토분쟁을 해결하길 주장해 왔음. 현재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이며 중국과 함께 노력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임.

#### 아. 중·러 관계

- **러시아 부총리, 중국 러 수십억 대 채무 면제 헬기 수입 '탄력'(12/30, 뉴시스)**
  - 중국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오래 된 대중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중국의 러시아산 헬기 수입 계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올레고 비치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계약 지연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남아 있던 약 157만 스위스 프랑(약 18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협약을 지난 18일 이행하면서 양국 기업 간의 헬기 수출입 건이 빨리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로고진 부총리는 자신의 글에 단 댓글을 통해 "파트너의 약속 이행은 즐거운 일"이라고 주장함. 그는 또 '채무 탕감'으로 러시아 채무부가 약 100억 루블(3500억 원) 규모의 JSC 러시아 헬리콥터사와 중국 기업의 20대 헬





- 기 수출 건에 대해 우선하여 용자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함.
- 한편 중국은 최근 양속인 인도가 러시아와 29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앞서 지난 24일 인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가 러시아제 Mi-17B-5 헬기 71대와 수호이(Su)-30 전투기 42대의 인도 현지 조립 생산을 위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자. 일·러 관계

##### ● 푸틴 대통령이 아베수상에게 축전, 양호한 양국관계에도 영토문제 해결 기대는 어려워(12/26, 산케이신문)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6일, 아베 신조 수상에 축전을 보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일러 관계를 발전시켜 갈 의향을 나타냄. 푸틴 정권은, 동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어 아베 정권과의 사이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쌓아 올리고 생각하고 있음.
-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푸틴은 축전으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표명함. 이타르 타스 통신도 같은 날, 새로운 수상 선출을 속보로 다루며 아베를 "우아한 정치가" 라고 소개하는 등 관심의 높음을 나타냄.
- 아베는 러시아의 주요 미디어에 의해 '강경파'라고 평가 되고 있는 한편,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음. 푸틴 정권 역시 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냉각 시키지 않고, 러시아가 향후 과제로 하는 극동·동 시베리아 개발에 일본의 협력을 얻고 싶은 것이 러시아의 의도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푸틴은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일소 공동 선언(1956년)에 근거하는 "2섬인도"로 약속을 이행할 모습을 보여 오질 않고 있어 영토 문제해결에 대한 밝은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차. 기 타

##### ● <야스쿠니방화범 '류창' 신병인도 결정 임박>(12/26, 연합뉴스)

-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38)에 대한 한국 법원의 신병인도 허용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중·일 외교 당국이 긴장하고 있음.
- 자신의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류창은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올 1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각각 화염병을 던짐. 그는 주한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뒤 처벌(징역 10월)을 받았음. 징역형은 지난달 6일 끝났으나 일본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구해 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고 있음. 관련법에 따라 법원 결정은 다음 달 6일 이전에 이뤄져야 함.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은 류창이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거절 사유인 '정치 사안'에 해당한다면 일본으로의 신병인도를 강하게 반대하며 류창의 자국 송환을 요구해왔음. 법원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 이후 중국과 일본 중 한 곳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태임. 특히 자국의 희망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직접적인 반발 강도는 중국이 더 거셀 것이라 관측이 많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6일 "이번 사안 자체를 한중 마늘파동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한국에 말하는 빈도나 강도는 그에 못지않다"고 중국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은 2000년 우리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자 곧바로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제한 등 강한 보복조치를 단행함.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우려가 적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자신들의 희망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정치권의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우익정권이 들어선 일본의 도발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정치권의 우파들 사이에서 한국은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면서 "그런 한국에 어떻게 대응할지 일본 정치권이 심각한 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음.
  - 한중, 한일 간 갈등 가능성에 더해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될 개연성도 큼. 류창이 어느 나라로 가든 중국과 일본이 서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인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임. 영토문제로 악화된 중일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것임. 정부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구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밝혔음.
- **中, 무인공격기 첫 비행…"新무기 실험 정상적인 일"**(12/28, 인민일보)
- 중국의 대형 무인 공격기가 곧 첫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27일 보도됨. 이와 관련해 27일 오후에 열린 국방부 연례브리핑에서 양위권(楊宇軍) 국방부 신문사무국 부국장이자 대변인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적 이익에 부응하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에 대한 시험비행, 실험, 시험제작 및 진수 등의 작업들은 모두 정상적인 일로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
  - 대형 무인 공격기가 곧 시험비행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보도의 진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본인은 관련 보도를 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적 이익에 부응하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에



대한 시험비행, 시험, 시험제작 및 진수 등의 작업들은 모두 정상적인 일로 과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답변함.

- 중국의 강력한 국방 건설은 자국 안보의 필요에 따른 것이자 세계 평화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